

---

# 찾아가는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

- 일 시 : 2016. 12. 19[월]
- 시 간 : 15:00 ~ 17:00
- 장 소 : 금산 문화의집





# 찾아가는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 1 목적

- 충청남도 및 시·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기회 부여
- 지역의 갈등 유형·상황의 문제를 상정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모델 적용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의 능력 향상 및 지식공유

## 2 내용

- 갈등 조정 전문가 특강(공공갈등 이론 및 법·제도 분석)
- 지역 현안 중심의 토론 진행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 3 행사개요

- 일 시 : 2016. 12. 19.(월), 15:00 ~ 17:00
- 장 소 : 금산 문화의집
- 참 석 : 약 30명
- 주최·주관 :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금산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 4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40~15:00	◦ 교육 준비 및 접수	
15:00~15:10	◦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소개	
15:10~15:50	◦ 주제발표 1 - 공공갈등과 충청남도 법·제도 분석	이 한 태 (충남대학교)
15:50~16:30	◦ 주제발표 2 - 지속가능 발전과 지방정부의 역할	최 병 조 (한국교육환경네트워크)
16:30~17:00	◦ 질의응답 및 토론	
17:00	◦ 폐회	





# 목 차



## I. 공공갈등과 충청남도 법·제도 분석 ..... 1

충남대학교 이한태

## II. 지속가능 발전과 지방정부의 역할 ..... 15

한국교육환경네트워크 최병조





# 공공갈등과 충청남도 법·제도 분석

- 충남대학교 이한태



# 공공갈등관리와 법제분석

이 한 태  
(충남대학교)

## 목 차

I 갈 등의 정 의

II 갈 등의 유 형

III 갈 등 관 리 법 제 분 석

## I. 갈등의 의의(1/2)



## I. 갈등의 의의(2/2)

### 유사개념과 비교

#### ● 협력의 의의

- 상호이익의 실현 및 증진
- 상호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한 자원의 교환

#### ■ 갈등과 구별개념

- 분쟁 : 복수의 행동주체간의 갈등관계가 발전,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에 관해 장애가 형성된 상태
- 경쟁 : 각 당사자의 활동이 상호의존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병행적으로 노력을 겨루기만 하는 것

#### ■ 협력과 구별개념

- 타협 : 이해관계자 둘이 서로 좋도록 절충하여 협의함, 또는 그 협의의 과정이나 결과
- 협상 : 둘 이상의 조직이 재화나 용역의 교환에 관련하여 직접 교섭하고 타협하는 것
- 협동 :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에 만족하는 것



## II. 갈등의 유형

### 원천에 따른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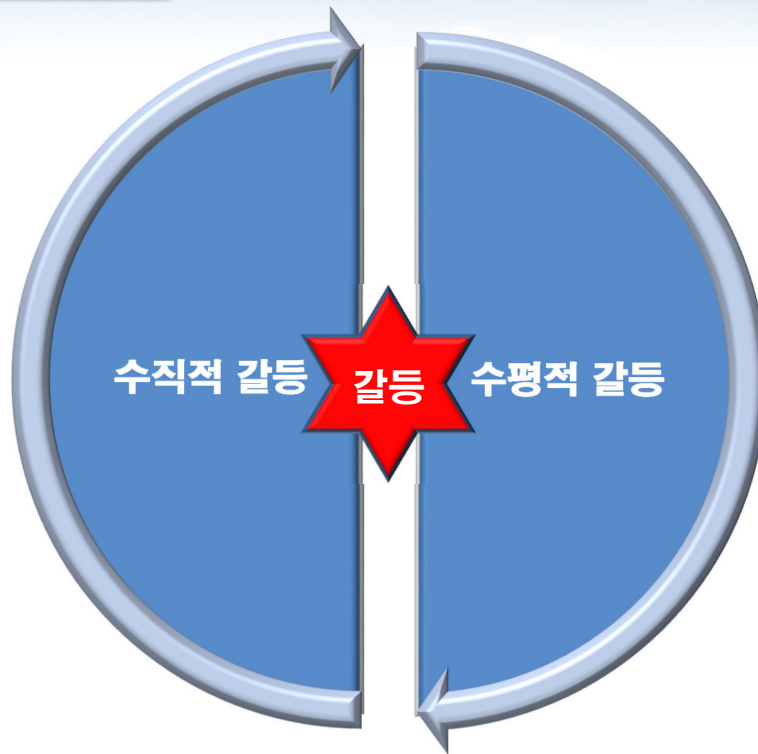
## II. 갈등의 유형

### 주체에 따른 유형



## II. 갈등의 유형

### 행태에 따른 유형



## II. 갈등의 유형

### 갈등관리의 의의와 구조

#### ● 갈등관리의 개념

- 조직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과정
- 갈등을 해소, 완화 / 때로는 갈등 용인, 허용 / 그에 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 나아가 조직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갈등을 조성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활동

#### 지원체계

- 인력
- 예산
- 조직
- 제도



#### 리더의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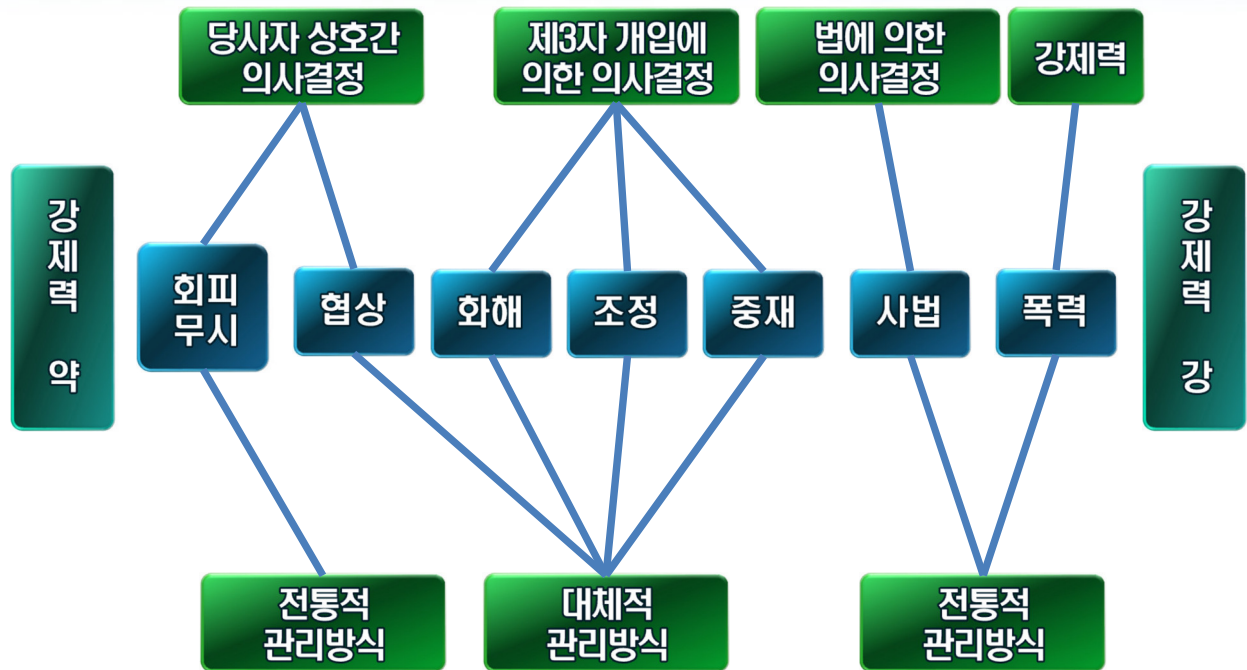
- 사기양양
- 잠재능력 활성화
- 구성원 통합 관리

#### 담당자의 관심

- 갈등에 대한 관심
- 적극적 태도
- 갈등해소의 책임감

## II. 갈등의 유형

### 갈등관리방식



## III. 갈등관리 법제분석

### 1. 공공갈등의 개념

- ① 어원: 葛藤, com[together]+fligere(to strike)
-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
- ③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2조 1호

### 2. 공공갈등의 유형

#### 1) 공공 · 공익 ·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공갈등

- ① 공공사업
- ② 공익사업
- ③ 국책사업
- ⑤ 최근 갈등의 쟁점
- ⑥ 정부간, 정부-집단간, 정부-지역주민간 갈등으로 분류 가능, 갈등주체가 복잡화 · 다원화

### III. 갈등관리 법제분석

#### 2. 공공갈등의 유형

##### 2) 공공정책 과정에서의 공공갈등

- ① 정부간 갈등 - 중앙정부 vs 지방자치 단체 (수직적 갈등)
- ② 정부와 주민간 갈등 - 정부 vs 시민 or 시민단체
- ③ 지방행·재정분야 갈등 -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인사 및 과세, 재정 등을 둘러싼 갈등
- ④ 지역개발분야 갈등 - 혐오시설, 하천, 광역시설, 지역개발사업 관련 갈등
- ⑤ 이익갈등 - 갈등당사자들이 사회경제적 이익 둘러싸고 대립할 때 나타나는 갈등
- ⑥ 권한갈등 - 이해당사자 간의 권한과 정부 간 갈등에서 주로 나타남.
- ⑦ 이해갈등 - 당사자 간의 사고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 ⑧ 가치갈등 - 당사자간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 III. 갈등관리 법제분석

#### 1. 헌법

- 공공갈등을 관리하고 극복해야 하는 이유 → 사회통합.
- ① 헌법의 기본원리들이 사회통합을 통한 갈등해소의 전제조건.
- ② 기본권의 한계, 제한원리, 보충성의 원리, 비례의 원칙 등 공적 갈등해결을 위한 원칙.

#### 2. 법률(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 [1] 법제화를 위한 노력

- ① 2003년부터 정부차원에서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논의와 준비를 시작
- ② 2005년 6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 제출
- ③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재와 국회 설득부족으로 법제화 좌절
- ④ 2007년 5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 ⑤ 이후 헌법령의 한계 지적, 법률화의 필요성 부각
- ⑥ 2010년 국회, 사통위를 중심으로 법률화 작업시작
- ⑦ 그러나 동 법(안)은 국회의 공청회 과정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폐기
- ⑧ 2016년 11월 11일 바즈미이위 대표박이로 공공기관이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사전



### III.갈등관리 법제분석

#### 2. 법률[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 [2] 법률(안)의 주요 내용

- ① 행정주체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종합 시책 수립, 시행 및 법령정비 .
- ② 이해관계인의 참여보장과 의견 수렴

##### [3] 법률 제정의 필요성

- ① 공공갈등 해결 근거로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만을 둬.
- ② 규정은 목적조항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이 주된 내용.

#### 3. 행정입법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1] 적용대상 및 원칙

- ‘갈등관리규정’ 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제정.
- ‘갈등관리규정’ 의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원칙 5가지.

### III.갈등관리 법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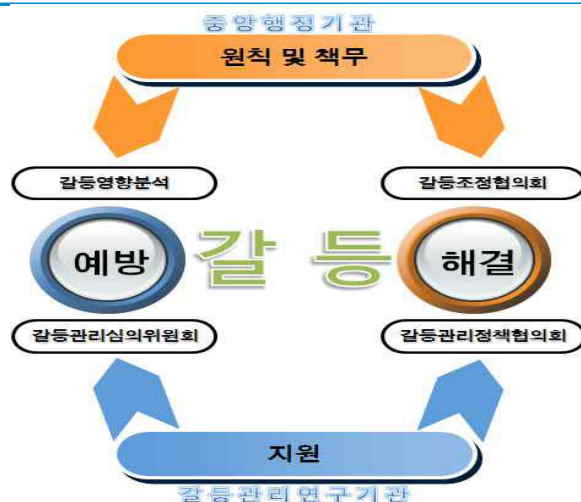
#### 3. 행정입법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2] 갈등의 예방

- 갈등영향분석 실시.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 [3] 갈등의 해결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 운영



### III. 갈등관리 법제분석

#### 4. 자치입법-조례-(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1] 법적 근거

- 헌법은 갈등관리 관련 법규에서도 최고의 규범.
- 자치입법권: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권한.
- 지방자치법 제8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 [2] 제정이유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목적과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제한
-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사전예방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 5. 갈등관리법령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

- 갈등영향분석 실시, 공공정책 추진 전에 갈등의 요인 예측, 분석, 조치.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분석 결과 반영.
- 발생한 갈등은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해결가능, 자율적 갈등해결.
- 갈등관리 연구기관의 역할 중요, 갈등관리 인프라 구축.

### III. 갈등관리 법제분석

####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168조에 근거한 국무총리실 소속의 정부위원회.
- 사무처리 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이견을 협의·조정

#### 2.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근거.
- 사무처리 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상호간 이견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 3.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근거.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

### III. 갈등관리 법제분석

#### 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보전법 제4조에 근거하여 환경부에 설치.
-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

#### 5.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보전법 제4조에 근거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또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분쟁 등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음.
- 지방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함
-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III. 갈등관리 법제분석

#### 1. 공법상 계약

- ① 공법상 계약 복수 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
- ② 의사의 합치와 법적 구속력의 의사를 중요한 요소로 함
- ③ 오늘날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문제해결 대안으로 부각.
-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은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 ⑤ 불평등 계약의 문제와 행정권의 약체화 등은 공법상 계약이 극복해야 할 단점.

#### 2. 비공식 행정작용

- ① ‘공식적행정작용’ 이 아닌 행정작용을 총칭하는 개념.
- ② 일방적인 비공식 행정작용과 행정청과 개인의 협력에 의한 비공식 행정작용으로 나눔.
- ③ 갈등해결형 행정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④ 공식적인 행정작용에 앞서 그 준비행위로서 또는 그 대체적인 것으로서 행해지는 것.
- ⑤ 공법상 계약과 공통점이 있지만, 구속력의 유무에서는 차이가 있음.
- ⑥ 현대 행정이 비공식적 행정작용을 선호하는 이유

### III.갈등관리 법제분석

#### 3. 행정작용으로서의 조정

- ①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해결기제 -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 ② ADR의 유형: 조정, 중재
- ③ ADR은 주로 사법영역에서 논의되어 왔고 최근 행정법영역에서의 관심의 대상이 됨.

#### 4. 행정 계획

- ① 행정계획 의미
  - 행정계획은 그 속성상 이미 갈등해결의 요소를 담고 있다.
- ② 행정계획의 기능
- ③ 행정계획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나, 법치주의를 약화시킨다는 실질적 기능면이 존재
- ④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계획책정상의 절차적 보장이 확립되어야 함.
- ⑤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 III.갈등관리 법제분석

#### 5. 행정절차법

- ① 행정절차법
  - 갈등해결형 행정법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영역.
- ②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이 논의 활발.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5조
  -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3조



### III.갈등관리 법제분석

#### 1. 행정쟁송에서의 조정

- ① 행정쟁송에서의 조정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조정은 활용될 필요가 있음.
- ② 행정쟁송제도로써 조정을 활용하는 방안
  - 1) 기존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조정을 적극 활용
  - 2) 행정심판, 행정소송과는 별도의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별도의 조정제도

#### 2. ombudsman제도

- ① 고충처리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임무 중 하나, 공공 갈등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합의의 권고) 및 제45조(조정)의 규정
- ③ 갈등해결을 위한 행정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

### III.갈등관리 법제분석

#### 3. 손실보장

- ① 손실보상법 - 간접보상, 생활보상의 문제는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것

#### 5. 행정심판

- ① 행정법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심리판결 하는 절차.
- ② 행정소송절차보다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용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
- ③ 판단기관의 독립성마저 확보되지 않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

#### 6. 행정소송

- ① 사법적 판단 자체는 갈등해결을 위한 기제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그 이외의 해결기제도 고려해야 함.
- ② 사법적 판단의 유용성이 모두 없는 것은 아니며, 행정주체 간 갈등 등의 특수한 경우는 유용하게 작용.





# 지속가능 발전과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교육환경네트워크 최병조



# 지속가능 발전과 지방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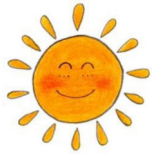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

201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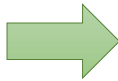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지속가능한 발전은 무엇인가?



원금



원금



이자

지속가능한  
발전

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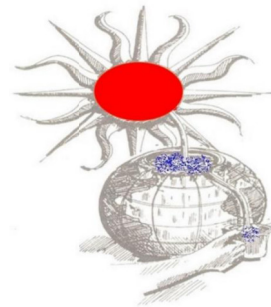


발전



이자 사용

원금 보존되면서 이자가 계속 발생



지속불가능한  
발전

원금



발전



원금+이자  
사용

좀 더 쓸 수 있으나 언젠가 원금 증발







내 손자도  
내가 누리  
고 있는  
것을 누리  
기를 ....





황장목이 되려면 3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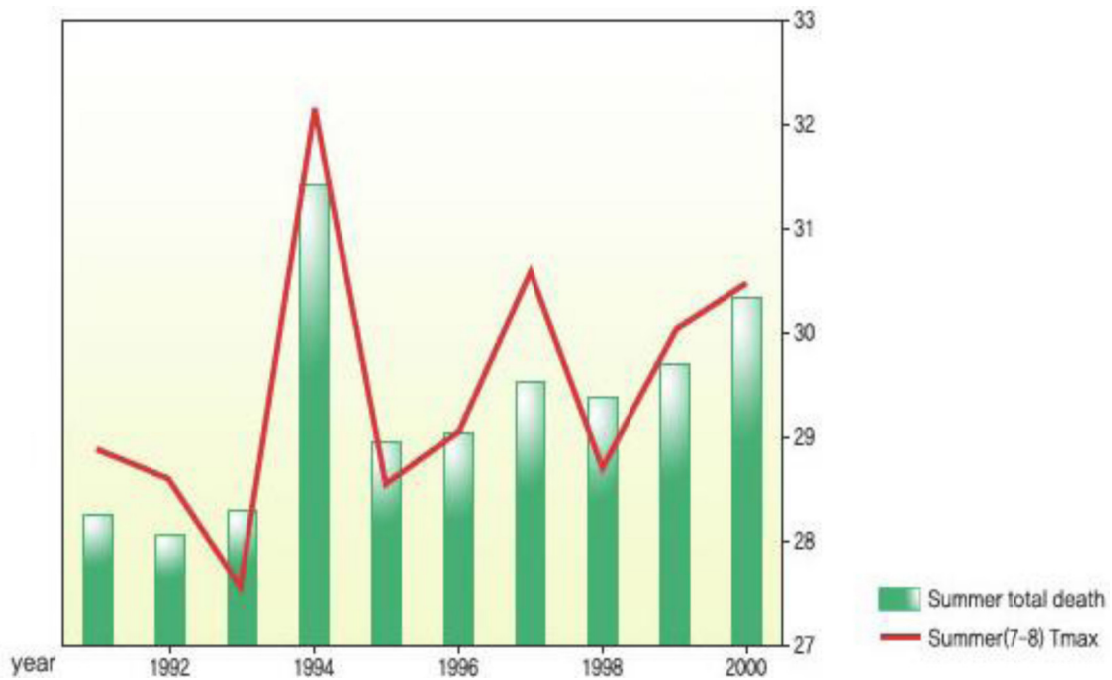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



같은 것을 누리면 계속 산다?



'91~'00 년간 서울지역 7-8월 평균 일최고기온과 사망자수 변화추이



10년간 7-8월 사망자수와 7-8월 평균 최고기온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 $r=0.896$ )

생명에 대한 감동



왜 밤에 피나?



꽃이 곤충을 선택



생명을 이해

달맞이꽃의 개화와 환경교육





# 우리 마을에는 미래가 있다





옛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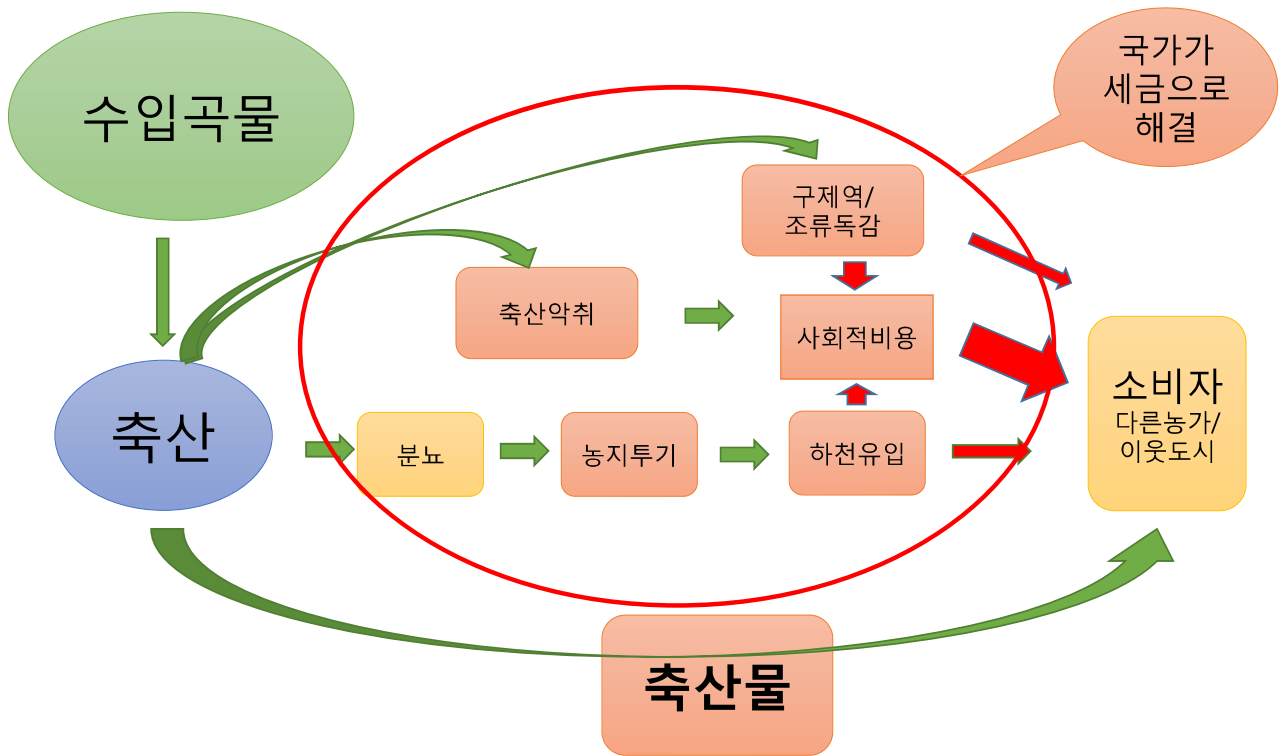


지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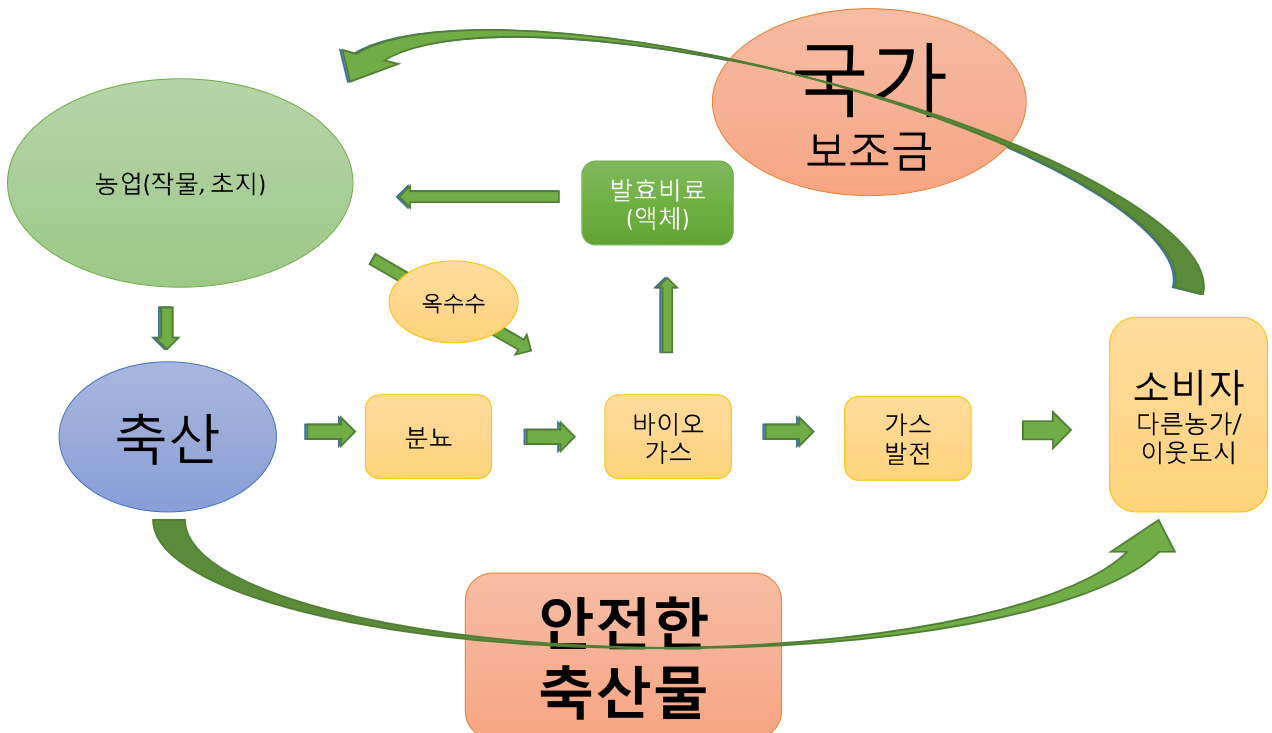
- 인구증가
- 과소비
- 석유, 화학쓰레기



## 축산에서 본 지속 가능한 발전



## 축산에서 본 지속 가능한 발전



# 축산에서 본 지속 가능한 발전



# 축산에서 본 지속 가능한 발전

축산 분뇨의 처리와 순환

태우면

열

퇴비화

열

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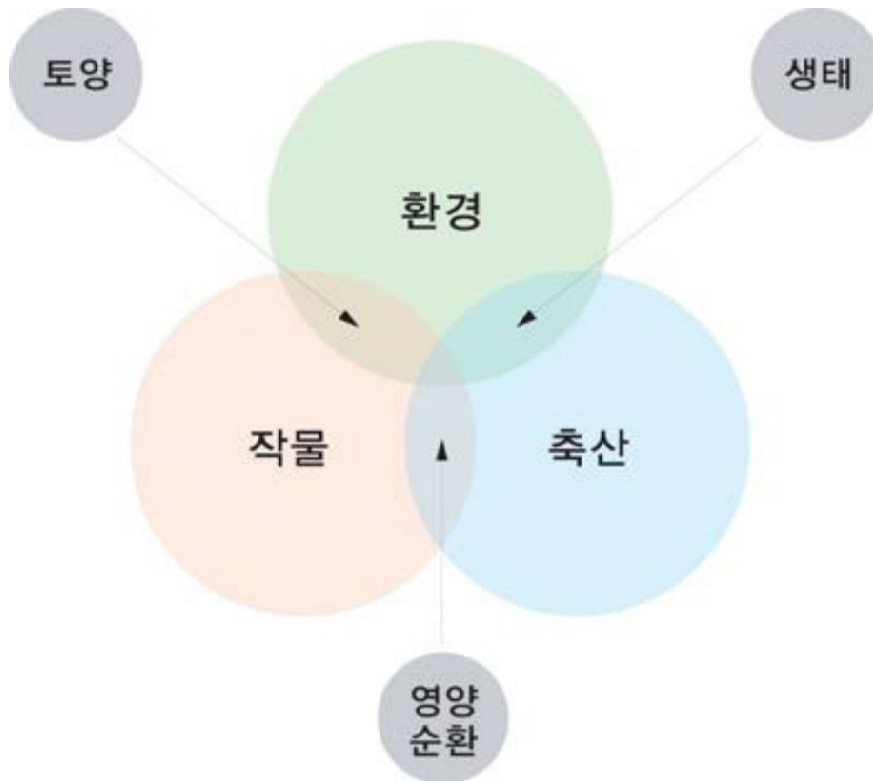
바이오 가스

열

퇴비

가스 + 전기

## 축산에서 본 지속 가능한 발전



## 축산으로 본 지속 가능한 발전





## 축산으로 본 지속 가능한 발전



## 축산에서 본 지속 가능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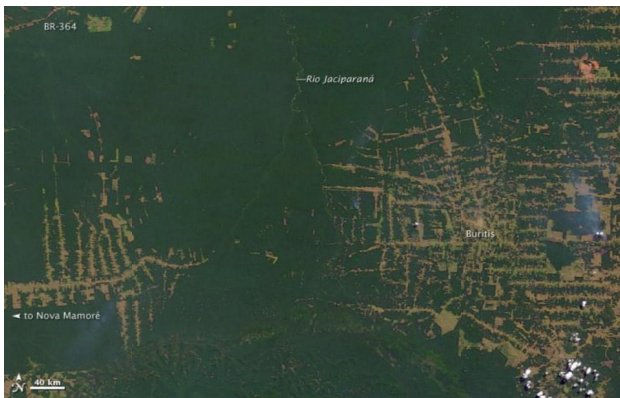
## 축산에서 본 지속 가능한 발전



## 토지이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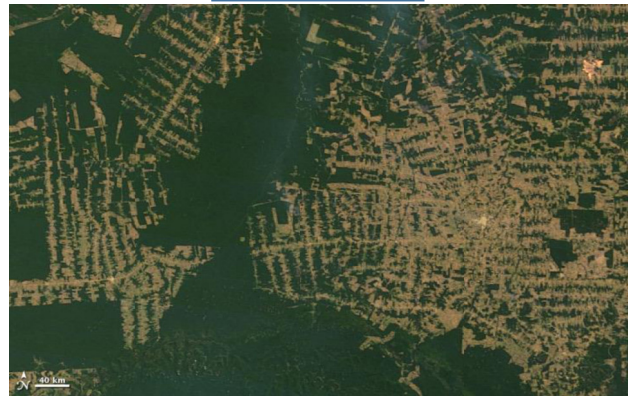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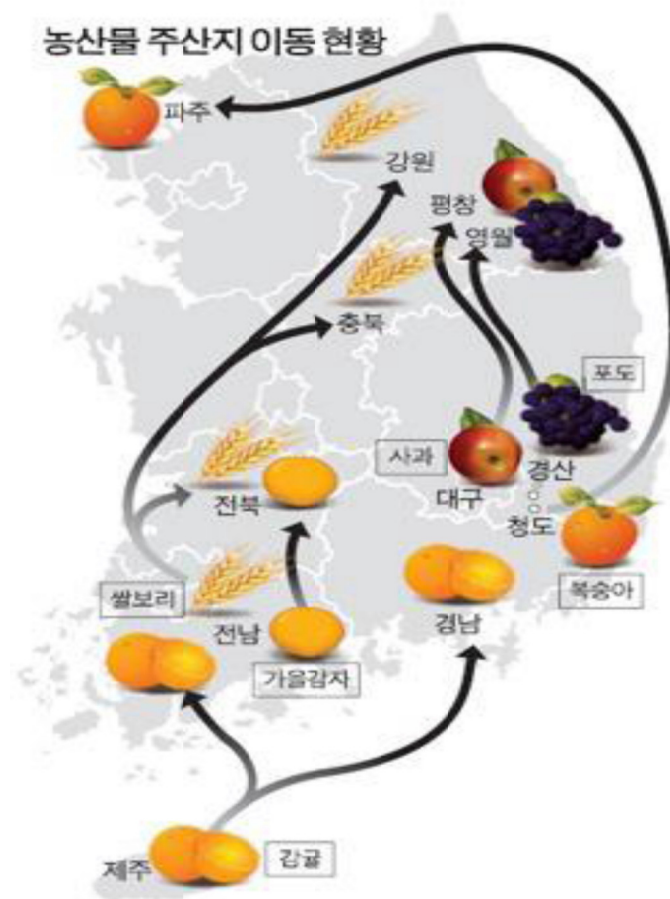
2003년



2007년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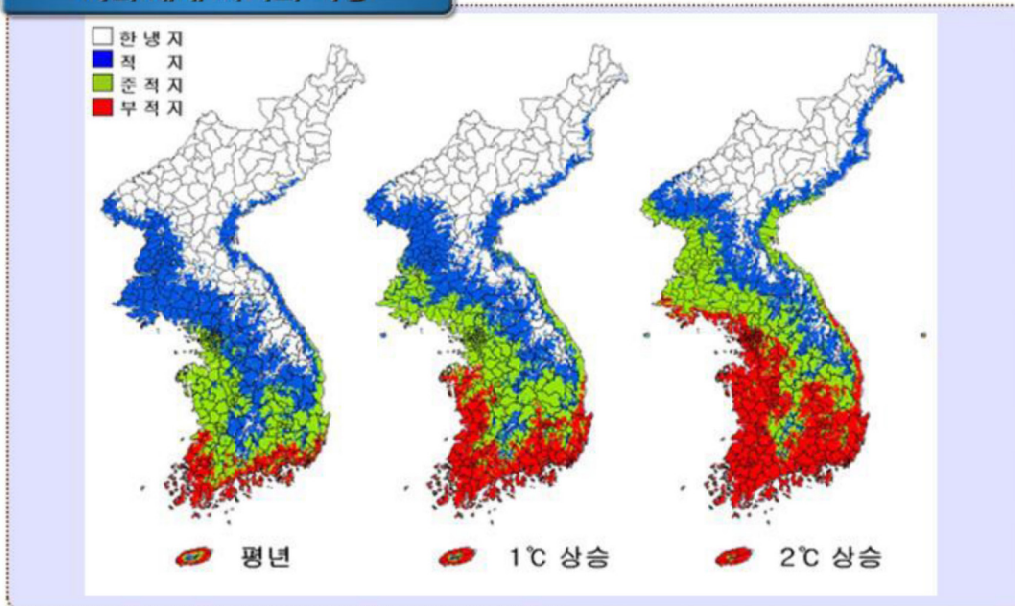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영향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1.5도 상승

제주지역 해수면 상승 지난 40년간 22cm

### 사과 재배 지역의 복상



집중호우 및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초래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유엔 산하기구인 정부간기후변화협약체(IPCC)
-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에서 공동 설립
-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 영향 및 적응, 완화 등 객관적인 평가보고서 작성
- 유엔 및 기후변화협약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 임무

##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자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92개국이 체결한 국제 협약으로 리우 환경 협약

## UNFCCC COP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유엔 기후 변화 협약(UNFCCC)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모여서 개최하는 회의
- UNFCCC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모여서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
- 제1차 당사국 총회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고,
-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온실가스의 구체적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

## 교토의정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온실가스의 구체적 감축 목표를 설정

- 선진 38개국(우리나라 제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발리 로드맵'이 채택
- 2009년 말까지 2012년 이후의 이른바 '포스트 교토 체제'를 위한 세계 각국 간 협정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까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참여해야 함

**기후변화**  
(climate change),

**지구 온난화**  
(global warming)

1일 평균 온도

0,3,6,9, 12, 15,18,21 ÷ 8

적산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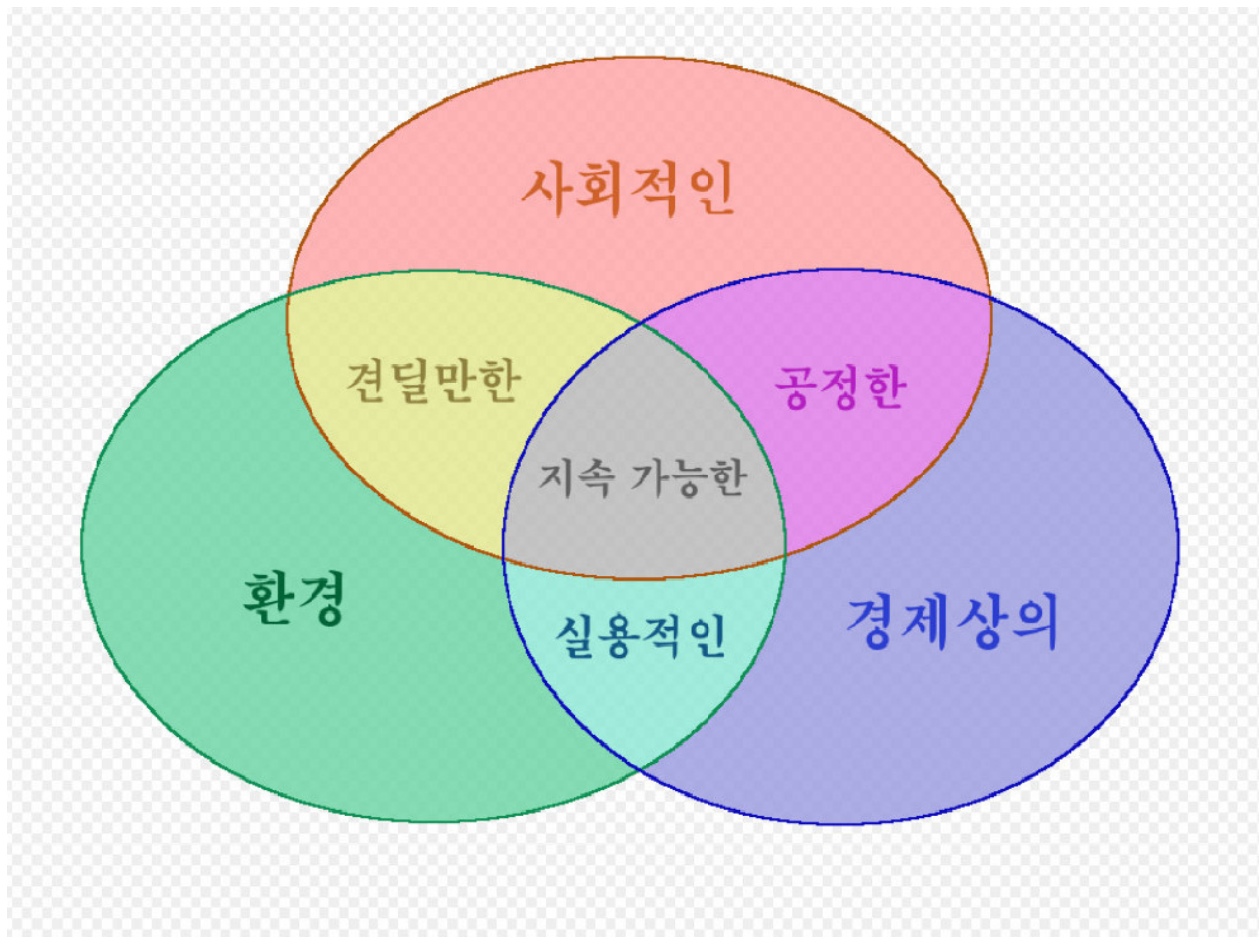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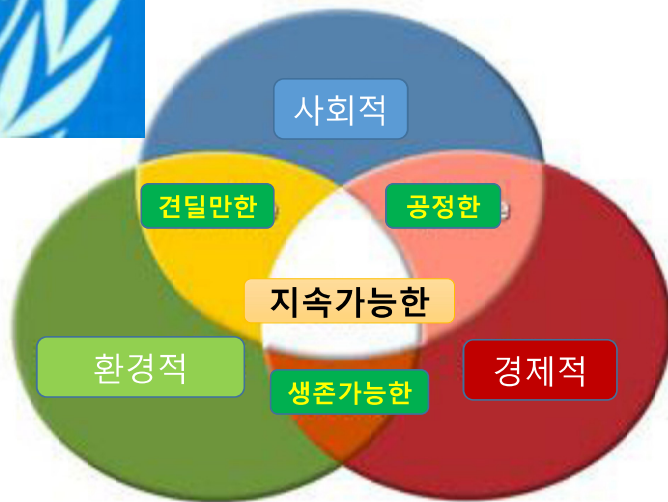
1 일의 평균 기온×날짜수

감자는 1,000도  
보리는 1,600도  
벼는 2,500도  
토마토는 1000도의 적산 온도에 달했을 때 첫 번째 꽃이 핀다



1983

1987



## 우리 공동의 미래(1987)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정책결정에 시민들의 참여 보장 - **정치체제**

유연하고 자기교정 능력을 갖고 있는 **행정체제**

자립적, 지속적인 기반 위에서 잉여생산물과 기술적 지식 생산 - **경제체제**

불균형으로 인한 긴장 해결 - **사회체제**

발전을 위한 생태적 토대를 보존 의무 존중 - **생산체제**

끊임없이 새로운 해결책 찾기 - **기술체제**

지속가능한 유형의 무역과 재정흐름 촉진 - **국제체제**

###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의의

- 필수적인 필요[needs]의 개념 + 환경용량의 한계
-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의 통합을 위한 틀을 제공
- 양립가능성 확인보다는 달성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
- 고통스런 선택과 정치적 의지

### ‘브룬트란트 공식’의 논란

- 애매함과 일관성의 부재
- 구체적으로 합의된 개념인가?
- 측정 가능한 기준의 필요성
- 그 자체를 목표로 보기보다는 창조적인 사고와 실천의 촉매 역할
- 특정한 경로라기보다는 권한부여[empowerment]의 개념



## 지방 의제21

지구적,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된 지속가능발전 실천 노력은 지역 차원에서 함께 실천되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 차원의 실천은 정부, 기업,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 지방 의제21의 개요

리우 선언의 「의제21(Agenda 21)」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세부실천계획으로 각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 의제21(Local Agenda 21)」을 지역주민과 합의하여 1996년까지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 처음으로 「지방 의제21」을 추진 하기 시작하였고,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방 의제21」 실천 계획과 조직이 등장하였다. 그림 의제21의 수립 체계 「지방 의제21」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시민운동이고 시민과 기업, 행정, 학계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환경보전 계획이며, 새로운 형식의 환경보고서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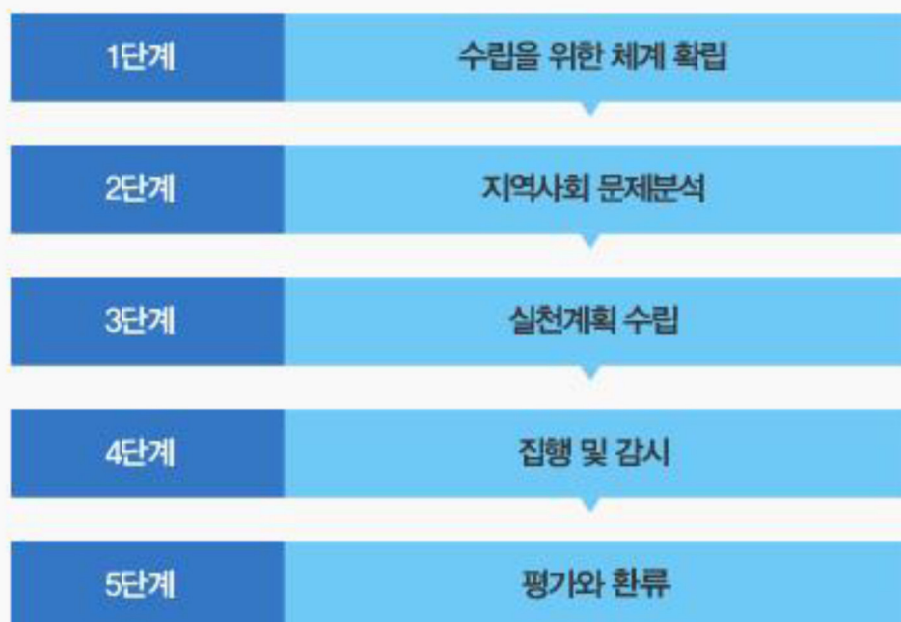
## 의제 21의 수립체계



## 지방의제21의 성격

- 첫째,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이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둘째,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환경 및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최소한 지역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행동규범을 기술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되어야 한다.
- 셋째, 「지방의제21」은 비전과 지침을 담은 보고서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토론과 합의내용이 보고서로서 작성되어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이 알기 쉽게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넷째, 「지방의제21」의 실천 주체는 주민 모두이다.
- 다섯째, 「지방의제21」은 기존의 “지역환경 관리계획”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역환경 관리계획”은 관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집행 및 투자 계획인 반면에, 「지방의제21」은 관과 **시민이 협동하여 작성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실천해 가는 실천계획**이다.

## 지방의제21의 추진 절차



## 지방의제21의 추진 절차

- 첫째, 누가 참여하며, 어떠한 형태로 작성할 것이며,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 인지 「지방의제21」수립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추진회의 구성, 포럼 설치, 원탁회 구성, 실무그룹과 자문그룹 구성, 거버넌스 구축 등 **다수의 주요 관련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환경비전과 지역 환경실태를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의 우선순위를 검토**한다.
- 셋째, **문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 단기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계획, 경제적 유인책,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 넷째, 분과위원회와 추진협의회를 거쳐 구체적인 목표와 우선순위, 추진일정, 실행주체, 책임분담, 재정 및 기술적 타당성,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 다섯째, 실천계획을 **집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천내용을 감시**한다.
- 마지막으로, 계획의 집행 결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목표의 달성 정도와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계획을 수정 보완**한다.

## 국가적 실천노력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실천 노력이 요구된다.
-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80여 개국 이상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국가전략, 계획, 정책 및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시민사회와 기업 및 정부 간의 참여와 협력을 이루어내고, 국가적 의사결정과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 총회**

**CMP**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에 대한 당사국 역할**





## ICLEI의 리우+20회의에 관한 평가

20년 전 리우 지구정상회담에 모인 각국과 정부 대표들이 채택한 의제21과 함께 ICLEI는 지방의제21의 선두에 섰고, 지속가능성을 향한 전진의 글로벌 성공스토리로 간주될 수도 있다. 반면, 국가 의제21을 집행해온 국가 성공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마찬가지로 UN기후변화 협약에서 교토의정서라는 이행규칙으로 진입하는 데도 13년이 걸렸다. 반면, ICLEI가 첫 번째 도시 지도자 정상회담을 소집하고, 지방기후행동계획에 1,000여 지방자치단체들을 참여시킨 기후보호도시캠페인에 착수하기까지는 불과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 92 Global Forum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2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 각자의 능력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
-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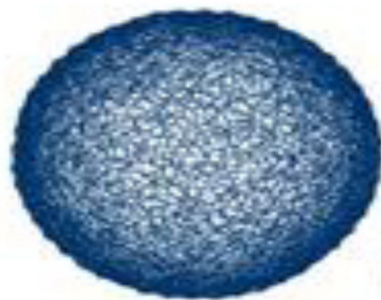
##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구분	개최 시기	장소(국가명, 도시명)
제1차	1995. 3. 28 - 4. 7	독일 베를린
제2차	1996. 7. 8 - 7. 19	스위스 제네바
제3차	1997. 12. 1 - 12. 12	일본 교토
제4차	1998. 11. 2 - 11. 1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제5차	1999. 10. 25 - 11. 5	독일 본
제6차	2000. 11. 13 - 11. 25	네덜란드 헤이그
제6차 속개	2001. 7. 16 - 7. 27	독일 본
제7차	2001. 10. 29 - 11. 10	모로코 마라케시
제8차	2002. 10. 23 - 11. 1	인도 뉴델리
제9차	2003. 12. 1 - 12. 12	이탈리아 밀라노
제10차	2004. 12. 6 - 12. 17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구분	개최 시기	장소(국가명, 도시명)
제11차	2005. 11. 28 - 12. 9	캐나다 몬트리올
제12차	2006. 11. 6 - 11. 17	케냐 나이로비
제13차	2007. 12. 3 - 12. 14	인도네시아 발리
제14차	2008. 12. 1 - 12. 12	폴란드 포즈난
제15차	2009. 12. 7 - 12. 18	덴마크 코펜하겐
제16차	2010. 11. 29 - 12. 10	멕시코 칸쿤
제17차	2011. 11. 28 - 12. 9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제18차	2012. 11. 26 - 12. 8	카타르 도하
제19차	2013. 11. 11 - 11. 22	폴란드 바르샤바
제20차	2014. 12. 1 - 12. 14	페루 리마
제21차	2015. 11. 30 - 12. 12	프랑스 파리



-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 채택
- 6가지 온실가스에 대한 정의
- 선진국에게 2008-2012년 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의무
- 2005년부터 발효



COP15  
COPENHAGEN

- 2009년 12월 코펜하겐합의
- 교토의정서에 불참한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post-2012 목표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온도를 2도로 제한하는 공동 목표 확인



- 2010년 멕시코 칸쿤합의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지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설립 합의
- 선진국과 개도국이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합의



- 2011년 더반플랫폼
- 선진국의 교토의정서 연장 합의
- 2020년 이후부터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체계 참여 체제 합의



- 2012년 도하게이트웨이
- 교토의정서 2차 공여기간을 2013-2020으로 설정하는 개정안 채택
- 미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불참
- 참여국 전체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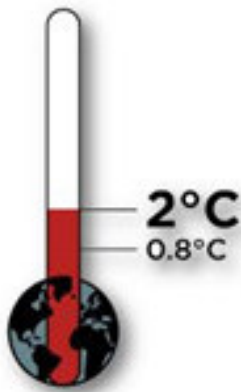


- 2013년 바르샤바결과
-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2020년 이후 감축 공약을 자체적으로 2015년 이전에 제출하기로 합의





- 2014년 리마선언
- 각국 기여공약(INDC) 제출 절차 및 일정 규정
- 기여공약에 반드시 포함할 정보 합의



-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량을 40-70% 감축하고, 21세기 말까지 탄소 중립화를 이행해야

##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나라



빨간색은 교토의정서를 세계 각국들과 함께 만들었으면서도 결국 비준을 거부 했다. 초록색은 비준한 나라이고, 회색은 비서명국, 노란색은 서명국이지만 비준을 희망하는 나라

## 파리 COP21의 결과

### 18년만의 새로운 기후체제

- 전 세계가 참여하는 첫 기후변화 대응체제[195개국, 95%]
- 금세기 후반 배출분과 상쇄분을 같게 하는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0
-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훨씬 낮게’ , 1.5도 제한 노력
- 5년마다 이전보다 강화된 감축계획, 55개국 55% 이상의 비준 필요

### 강제조항 없는 공허한 선언?

-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에는 법적 구속력 부여하지 않음
- 한국 기후변화 대응 노력 세계 최하위권 (58개국 중 54위)

## 파리 COP21의 결과

	1997 교토의정서	2015 파리기후협약
대상 국가	37개 주요 선진국	195개 당사국
적용 시기	202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방식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신기후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li> <li>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까지 제한</li> <li>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1000억 달러 지원</li> <li>2023년부터 5년마다 탄소 감축상황 보고</li> </ul>
한국	감축 의무 부과되지 않음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

## 파리 COP21의 결과

시기	내용
2016-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국 의회 협정 비준</li> <li>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배정</li> <li>관련 법 제, 개정</li> </ul>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토 의정서 체제 종료</li> </ul>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리협정 체제 시작</li> </ul>
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li> </u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165275](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165275)

## 대한민국 OECD 1위 50 가지

- |                         |                                 |
|-------------------------|---------------------------------|
| 1. 자살률 - 1위             | 26. 심근경색 사망률 - 1위               |
| 2. 산업재해 사망률 - 1위        | 27.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 1위            |
| 3. 가계부채 - 1위            | 28. 노령화 지수 - 1위                 |
| 4. 남녀 임금격차 - 1위         | 29. 국가채무 증가율 - 1위               |
| 5. 노인 빈곤률 - 1위          | 30. 자살 증가율 - 1위                 |
| 6. 청소년 흡연율 - 1위         | 31.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율 - 1위          |
| 7. 성인 흡연율 - 1위          | 32. 실업률 증가폭 - 1위                |
| 8. 가장 낮은 최저임금 - 1위      | 33. 대학교육 가계부담 - 1위              |
| 9. 저임금 노동자 비율 - 1위      | 34. 낙태율 - 1위                    |
| 10. 자동차 접촉 사고율 - 1위     | 35. 과학 흥미도 뒤에서 - 1위             |
| 11. 인도에서 교통사고율 - 1위     | 36. 중년여성 사망률 - 1위               |
| 12. 보행자 교통사망률 - 1위      | 37. 사교육비 지출 - 1위                |
| 13.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 1위   | 38. 15세 이상 술 소비량 - 1위           |
| 14. 노인 교통사고 비율 - 1위     | 39. 독주 소비량 - 1위                 |
| 15. 교통사고 사망률 높은 국가 - 1위 | 40. 출산율 제일 낮은 국가 - 1위           |
| 16. 학업시간 가장 높은 순위 - 1위  | 41. 근무시간 많은 국가 - 1위             |
| 17. 환경평가 뒤에서 - 1위       | 42. 세 부담 증가속도 빠른 국가 - 1위        |
| 18. 어린이 행복지수 낮은 순위 - 1위 | 43. 국가부채 증가속도 - 1위              |
| 19. 청소년 행복지수 낮은 순위 - 1위 | 44. 식품 물가 증가율 - 1위              |
| 20. 이혼 증가율 - 1위         | 45. 양주 소비율 - 1위                 |
| 21. 결핵 환자 발생률 - 1위      | 46. 저출산 - 1위                    |
| 22. 결핵 환자 사망률 - 1위      | 47. 공교육비 민간 부담 - 1위             |
| 23. 당뇨 사망률 - 1위         | 48. 사회안전망 가장 안 좋은 순위 - 1위       |
| 24. 남성 간질환 사망률 - 1위     | 49. 정치적 비전이 안 좋은 순위 - 1위        |
| 25. 대장암 사망률 증가율 - 1위    | 50. 고등교육 국가가 지원해 주는 비율 뒤에서 - 1위 |





## 2001-2015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2000. 9)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2016-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 9)



우리 공동의 미래 (1987)	우리가 원하는 미래 (2012)	SDSN (2014)	SDGs (20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해결을 목표로 하는 성장</li> <li>성장의 질적 변화</li> <li>직업/식료품/에너지/물/위생설비에 대한 인간 기본욕구의 충족</li> <li>지속가능한 인구 수준 및 사회발전계획에 따른 인구정책</li> <li>자원기반의 보존과 사용효율 증대</li> <li>기술혁신능력의 배양과 위험관리 방향 재설정</li> <li>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에 대한 종합적 고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퇴치</li> <li>식량안보, 영양, 지속가능한 농업</li> <li>물과 위생</li> <li>에너지</li> <li>지속가능한 관광</li> <li>지속가능한 교통</li> <li>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li> <li>보건/건강 및 인구</li> <li>생산적인 고용확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보호촉진</li> <li>해양</li> <li>도서국 개발</li> <li>최빈국 개발</li> <li>내륙개도국 개발</li> <li>아프리카 개발</li> <li>지역적 노력</li> <li>재난위험감소</li> <li>기후변화</li> <li>산림</li> <li>생물다양성</li> <li>사막화, 토지황폐화, 가뭄</li> <li>산, 산악지역 개발</li> <li>화학물질 및 폐기물</li> <li>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li> <li>광업</li> <li>교육</li> <li>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아 등 절대빈곤 퇴치</li> <li>지구적 한계 내에서 국가 발전 실현</li> <li>모든 아동과 청년의 생애주기 및 생계를 위한 효과적 교육</li> <li>성평등, 사회적 통합 및 인권의 실현</li> <li>생애주기 건강과 웰빙의 실현</li> <li>영농시스템과 농촌생산성의 향상</li> <li>통합적이고 생산적이며 회복력 있는 도시로의 도시발전 역량배양</li> <li>인간유발 기후변화의 억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li> <li>생태계 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확보와 물 및 기타 자연자원 관리</li> <li>지속가능발전 지향 거버넌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퇴치</li> <li>기아해소, 식량안보, 지속가능농업</li> <li>보건증진</li> <li>교육보장과 평생학습 향상</li> <li>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li> <li>물과 위생 제공 및 관리 강화</li> <li>지속가능에너지</li> <li>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li> <li>인프라 구축과 산업화</li> <li>불평등 해소</li> <li>지속가능도시</li> <li>지속가능소비생산</li> <li>기후변화 대응</li> <li>해양과 해양자원</li> <li>육상 생태계</li> <li>평화, 인권, 민주주의</li> <li>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li> </ol>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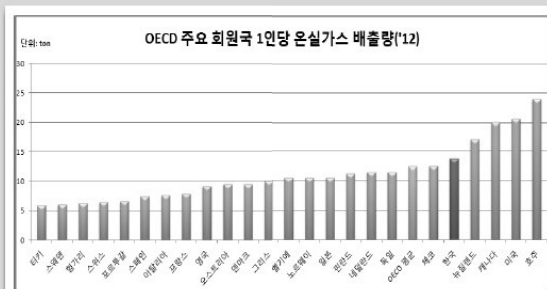
	SDGs	제3차 기본계획 14개 전략
1	빈곤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2	기아(식량/농업)	2-2. 지역간 격차 해소,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3	건강/웰빙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4	교육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5	양성평등	
6	물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7	에너지	3-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8	경제성장/일자리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9	산업화/혁신	
10	불평등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11	도시/공간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2-4. 안전관리 기반 확충
1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13	기후변화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14	해양생태/자원	1-2.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확대
15	육상생태/자원	
16	평화/인권/민주주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17	글로벌 파트너십	4-1.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4-3.동북아환경협력강화

##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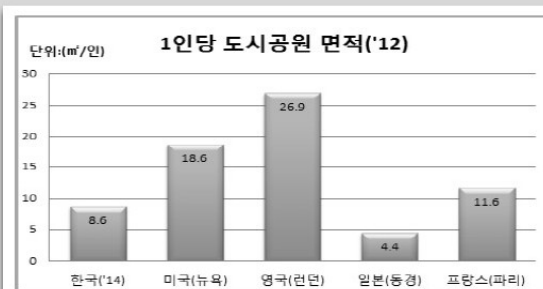
64개 지표 중 40개(62.5%) 개선, 24개(37.5%) 악화\* ('10~'14 변화율 기준)

	계	환경분야	사회분야	경제분야
개 선(개, %)	40 (62.5)	10 (43.5)	16 (76.2)	14 (70.0)
악 화(개, %)	24 (37.5)	13 (56.5)	5 (23.8)	6 (30.0)
총 계(개, %)	64 (100)	23 (100)	21 (100)	20 (100)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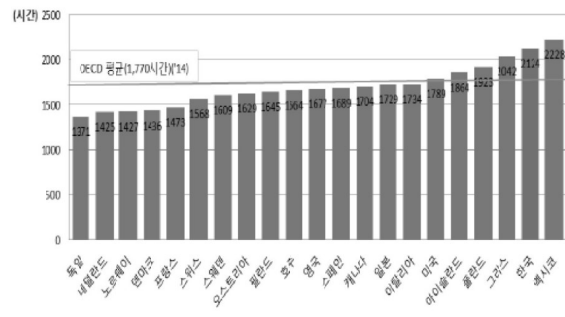
1인당 도시공원 면적(m<sup>2</sup>/인)



자원부유국 제외하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최상위권,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좁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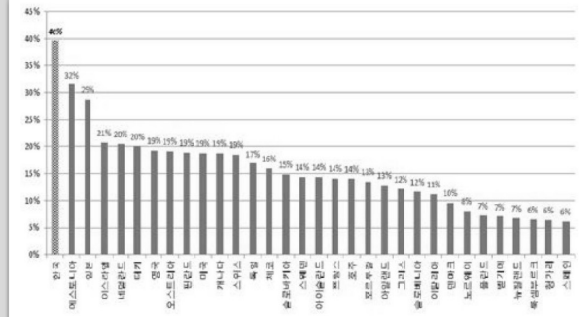
##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결과

연간 근로시간('14)



자료: OECD Stat.

성별 임금 격차(%)



자료: OECD 2013

빈곤, 남녀평등, 수명/사망, 교육 항목의 지표를 중심으로 전반적 개선 추세 (사회분야 21개 지표 중 16개(76%)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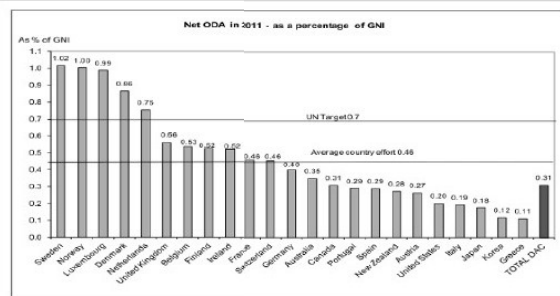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범죄발생률 등은 악화 추세

\* 비정규직 임금 비율('10년 53.3%→'14년 48.4%),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10년 56.7%→'13년 54.3%),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10년 4.3%→'14년 4.7%), 범죄발생률('10년 10만명당 1,901건→'13년 2,106건)

근로시간, 양성평등 관련 지표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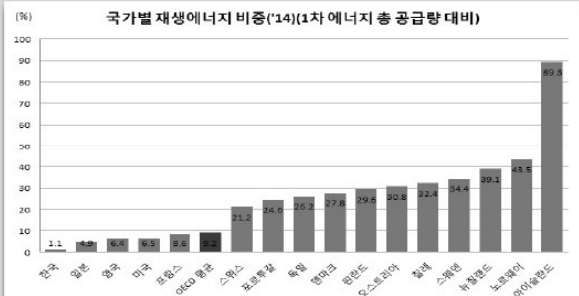
##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결과

GNI 대비 ODA 비율(%)



자료: OECD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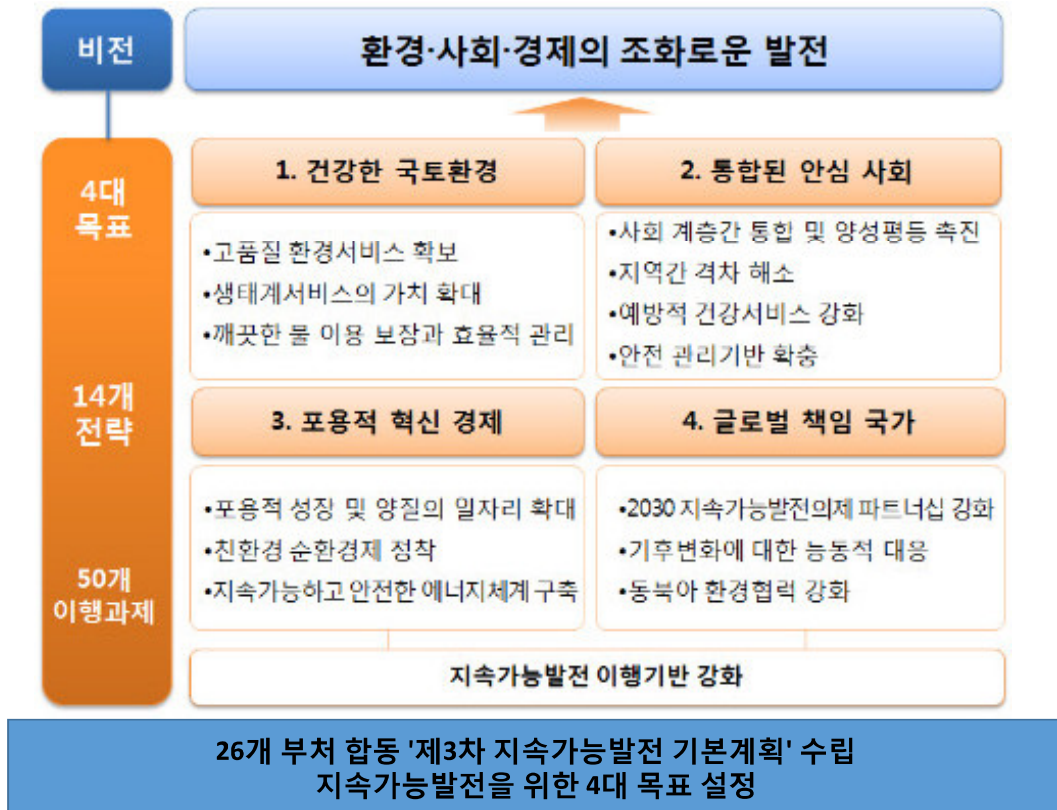
자료: IEA 2015

경제성장, 교통, 정보화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보이는 지표가 많지만, 질적 측면에서 취약(경제성장률, 투자 등)

\* GDP 대비 순투자율 : '10년 32.1% → '14년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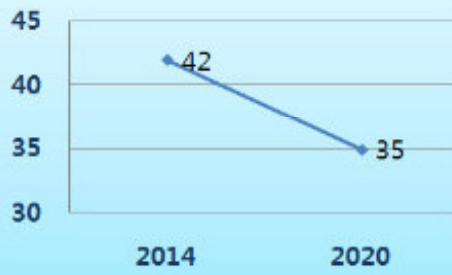
개도국 지원, 신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지표 역시 개선되고 있으나, OECD 국가 평균과 비교시 저조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어린이 아토피 질환 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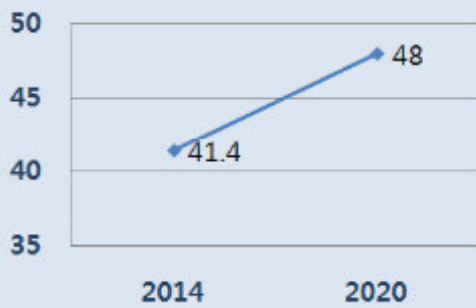
단위: 만 명

전국 직장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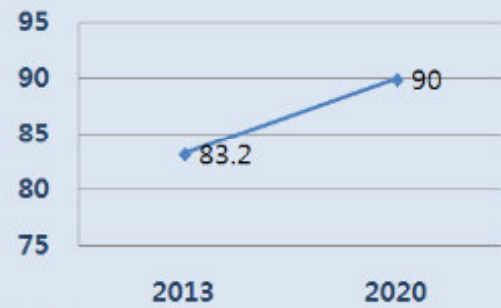
단위: 개소

청년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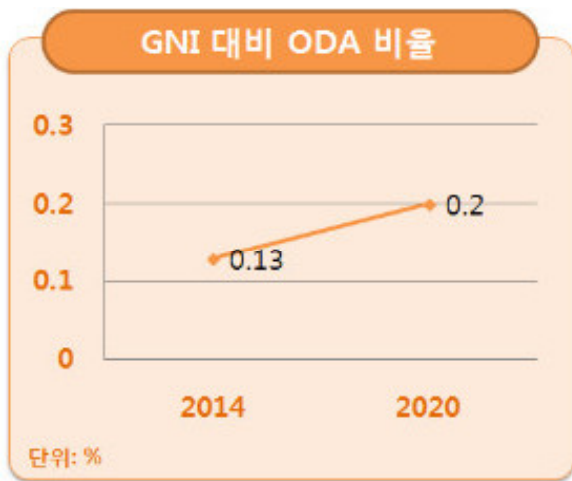


단위: %

재활용률



단위: %



##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발전 변화전망

분 야	주요지표	2010년	2015년	2030년	OECD 평균 (2010년 회원국 평균)
환 경	하천 수질오염도(BOD, ppm)	1.48	0.95	0.95	2.7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mu\text{g}/\text{m}^3$ )	50	40	35	35
	1인당 물 소비량(L/일)	332('09)	308	242	256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text{tCO}_2$ )	10.31('08)	8	8	10.61('08)
	1인당 도시공원 면적( $\text{m}^2$ )	11.3	14.4	20	19.79('06)
경 제	1인당 GDP(USD)	20,591('09)	26,508	37,833	33,732('08)
	에너지원단위(TOE/천 \$ , 2000년 PPP기준)	0.197('09)	0.178	0.123	0.161('09)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54	4.33	11.0	7.7('08)
	고용율(%)	63.8('08)	64.3	66.7	66.7('08)
	GNI 대비 ODA 비율(%)	0.12	0.25	미정	0.32
사 회	빈곤인구비율(%)	15	13	10	11('06)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0.314('09)	0.300	0.280	0.311('09)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55.3('08)	60.0	73.0	72.2('08)
	고령인구비율(%)	10.7	15.1	28.3	14.8('08)
	기대수명(년)	80.5('09)	81.4	84.03	81.6('09)

### 리우회의

-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수준의 거버넌스로서 지방정부가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을 교육하고 끌어 모으며 반응하는 데 생생한 역할을 맡고 있다.”

- 의제21 제28장[1992]

### 리우+5

- “지방의제21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행동계획의 준비와 이행을 바탕으로 지방 수준에서 의제21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참여적이고 다부문적인 과정이다.”

### 리우+10

- 우선순위: 자연자원관리, 대기질, 수자원관리, 에너지관리, 교통
- 개선사항: 폐기물 감소, 대중의 인식, 수질, 도시 미화

## 오늘날 지방 지속가능성 과정에 대한 평가 (ICLEI, 2012)

- “지속가능성을 향한 지방성(locality)과 지방 정책의 개발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부문의 의도적인 활동”

### 지방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 지방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고, 공동체 스스로 규정한 목표를 반영한다.

각자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지방의제21은 하나의 운동으로 고취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 지속가능성 개념이 의제21을 전혀 들어보지 않은 자치단체, 기업, 단체들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 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 이클레이는 지방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ICLEI: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하는 명칭으로 창립.
- 2003년 세계총회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로 공식명칭을 변경하였고, 이클레이로 약칭
- 1990년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1차 지방정부세계 회의'에 참석한 43개국 200개 지방정부에 의해 창립.
- 1991년 캐나다 토론토 세계사무국과 독일 프라이부르크 유럽사무국에서 활동을 시작
- 최초의 글로벌 프로그램은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단위 지속가능발전 운영 프로그램인 「지방의제21 (Local Agenda21)」과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후보호도시 캠페인 (CCP : 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 이클레이의 프로그램과 캠페인은 단순히 환경적 차원을 넘어 광범위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고려하고 지원



## 이클레이의 10 의제

지속가능한 도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도시

생산적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재난과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도시

똑똑한 도시

생태교통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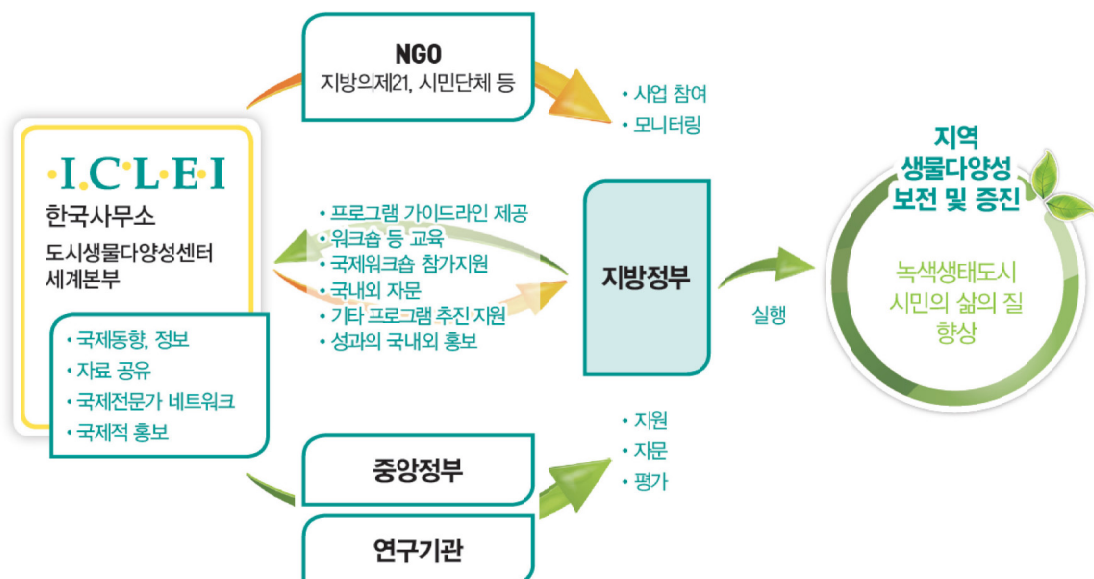
행복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및 녹색 구매

도시-지역 간 지속가능한 협력

## ICLEI 의 프로그램

이클레이 프로그램 : 기후, 생물다양성, 생태교통, 친환경 교통주간



지속가능성을 향한 세계지방정부의 기초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추진 전략



##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분야별 내용(예)

연도	지역자립 경제	녹색지역 경제	이웃관계	공동체 형평성	생태적 건강	기후변화 대응	공동체 문화	민주주의 역량	합계
2011	1	1	1	1	3	3	6	1	17
2012	1	1	2	1	3	2	6	2	18
2013	4		1	1	5	4	8	5	28
2014	4	1		1	2	2	11	2	23
합계	10 (11.6%)	3 (3.5%)	4 (4.7%)	4 (4.7%)	13 (15.1%)	11 (12.8%)	31 (36.0%)	10 (11.6%)	86



지구를 살리고 사람이 행복한 도시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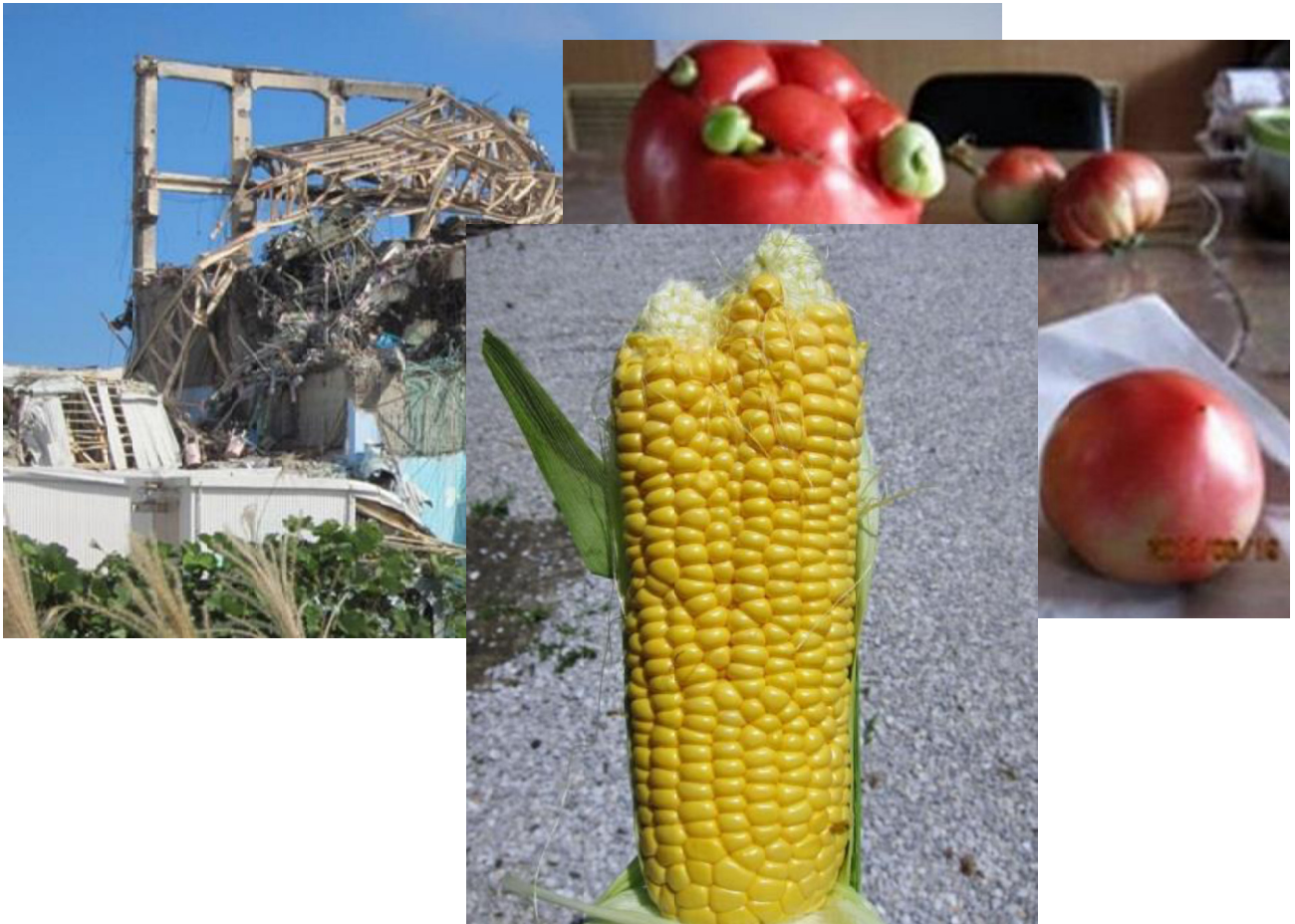
**뜨는 도시 지는 국가**

벤자민 R. 바버 지음 | 조은경 · 최은경 옮김 | 21세기북스

2014년 05월 20일 (종이책 2014년 05월 19일 출간)

## <뜨는 도시 지는 국가>

- 도시는 이념과 정당 강령보다는 문제해결을 선호한다.
- 주권과 관할권의 배타성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 경계를 초월한 협력의 동인
- 도시는 정치적으로 지역적이지만 공적 성향이 있다.
- 공공의 연합체라는 점 덕분에 도시는 세계의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사람들은 도로에 파인 곳과 교통체증에 대해 시장과 이야기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더군요.”
- 시장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위치에 있으며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생존에 최고의 희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6358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644404>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337655>

## 지속가능발전 유엔회의의 흐름

### 유엔환경개발회의 / 글로벌포럼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 ◆ Agenda 21 작성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2002년 요하네스버그)

- ◆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평가

###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2012년 리우데자네이루)

- ◆ 지방정부가 주요 실천 주체
- ◆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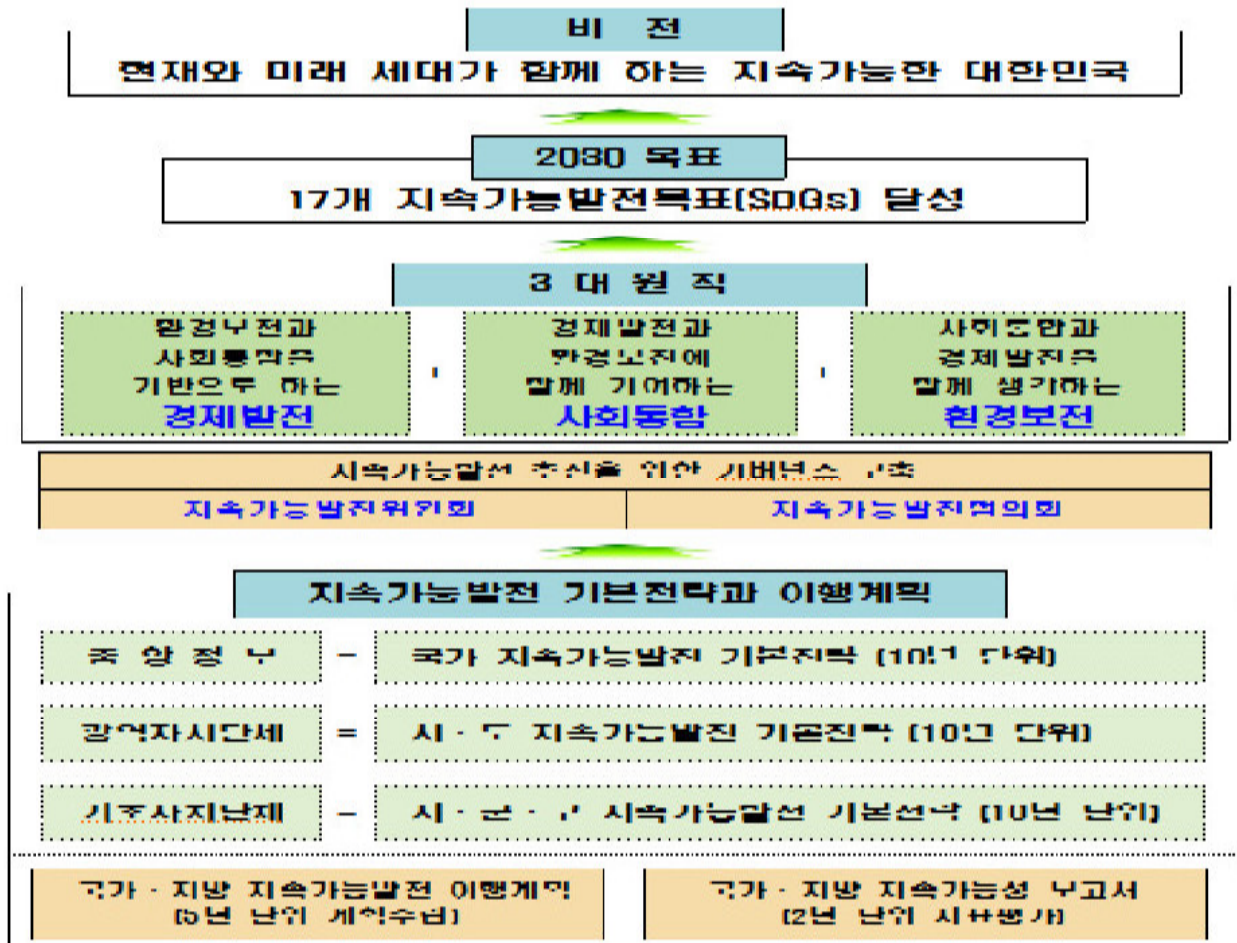


##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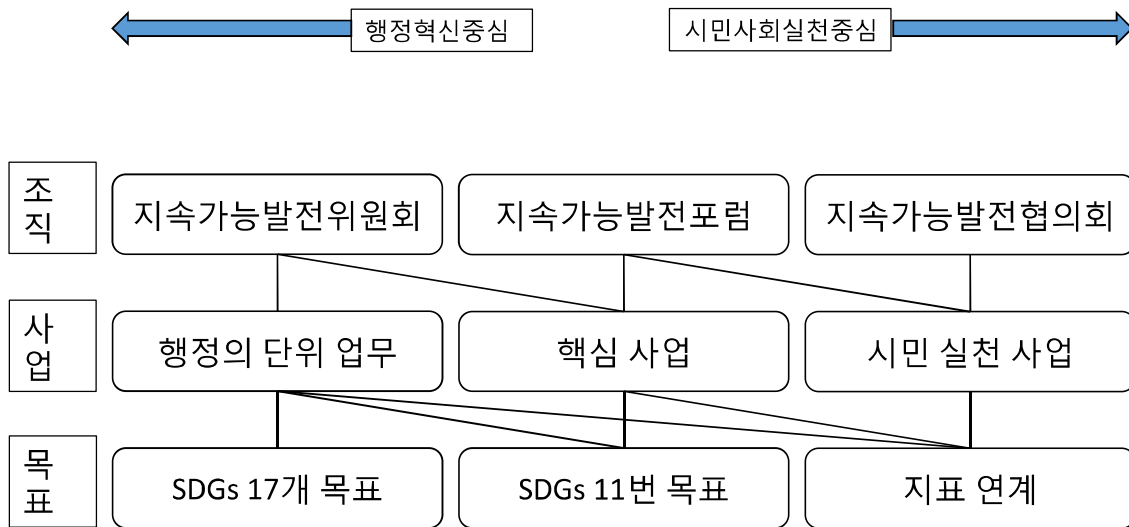
	조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담당 행정조직	전략 및 이행계획
서울 강동구		△[협의회]		
충청남도	○(기본조례)		○	
인천 남구			△(명칭 변경)	
서울 도봉구	○	○	○	
서울시	○	○	○	○(기본계획)
인천 부평구 광주, 담양	○	○	○	○
충남 아산시			○	

## 2015-2018 이클레이 한국 전략계획

1. 유엔 SDGs 내 도시 목표의 수립과 지속가능성 평가
2. 지역 기후행동의 확대, 실천
3.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계획과 실천
4.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정책과 사업 성과의 10% 향상



##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 방향



**'나 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멍청이고,  
나 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다.'**

94%의 사람들이 자신의 유머감각을 평균이상으로 생각하고  
80%의 운전자들이 평균이상의 운전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세계 75%의 사업가들은 자신을 평균이상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과 능력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이라는 사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